

시론



박인석 칼럼니스트

‘우리의 소원’은 지금도 통일일까!

6월은 6·25에다 현충일이 있는 보훈의 달이다. 또한 보훈처가 국무위원 장관급 보훈부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키며 산화한 영령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더 각별히 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그리던 통일, 통일이어서 외라’며 통일의 꿈을 키워온 세월이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땐 땀이 가슴이 몽글하고 언젠가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 같은 것이 일어나곤 했다. 지금도 이 노래가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다.

1950년의 한국전쟁 3년은 수백만 명의 주검과 부상 그리고 천만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냈다. 당시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였으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이산가족인 셈이다. KBS가 1983년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산가족 찾기 열풍은 민족적 호응을 받으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일 한 뱃헌 사연이 TV를 통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며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슬픔처럼 함께 울었다. 민족적 비극이 만들어낸 현대판 최대 서사시였다. 1965년 신영균, 최무룡 주연의 영화 ‘남과 북’의 주제곡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이산가족 찾기 현장에서 불렀을 땐 전 국민이 함께 울었다. 이어서 히트한 노래가 설운

도의 ‘잃어버린 30년’이었다. 덕분에 설운도는 무명의 설움을 벗고 일약 스타가 됐다. 138일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진기록까지 낳았다.

지금도 통일은 국가적 소원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국민은 통일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 시대가 많이 흘렀고 국력 또한 달라진 탓이다. 대한민국은 비약했고 세계무대에서 우뚝섰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국민적 생각이 슬슬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수출도 정보화도 언론도 두루 괄목상대하다. 능력만 있으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을 하루아침에 거머쥘 수도 있다.

어느 날 우리 한반도에 도둑이 든 것처럼 갑자기 통일이 될까.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정치체제라는 게 굳어져 버리면 지속되는 속성이 있다. 국민은 그 자체로는 권력 체제를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지금으로는 어떠한 기대마저 불가능하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틈바구니에서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될 턱이 없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대립전을 치르면 치렀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녹록치 않은 까닭이다. 남과 북은 양쪽의 정치적 선택이 다른 나라이다. 민영돈 전 육사 교장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북방 정책을 비판하다가 웃을 벗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해 상황의 만회를 노렸었다. 그때 전방의 군인들은 북한이 적이 아닌데 겨울에 동상 걸리고 여름에 모기 뜯기면서 왜 총을 겨누고 싸워야 하는 것인가에 심한 회의를 겪

었다고 한다.

오늘의 남한은 BTS와 블랙핑크 음악에 지구촌이 열광하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가 불티나게 세계로 팔려나간다. ‘기생충’,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땐 덩달아 노래, 드라마, 화장품, 음식 등 ‘K’가 붙은 문화상품이 각광을 받았다. 시점을 같이 하여 보리스 존슨 전 영국총리 등 세계 지도자들은 한국이 가장 성공한 민주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차켜세웠다.

식민지 시절 우린 나라를 되찾는데 모든 걸 바쳐야 했다. 전쟁이 났을 땐 조국을 지켜야 했고 굶주렸을 땐 잘 살기 위해 뼈를 깎았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대가를 흘렸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합친 우리의 국력은 지금이 절정이고, 이내 하향 곡선을 걱정하고 있다. 인구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풍요의 한국과 위기의 한국은 동시에 존재하며 북한을 쟁기면서까지 통일을 이룩할 절실함에 회의를 갖고 있다. 통일신라 이후 130년간을 한반도 통일이었지만 분단 또한 70여년을 넘어서고 있다. 주적 북한을 두고 감상적 통일에 대한 회의가 커진 까닭이다. 이제 통일의 추진은 외교 전략이 우선해야 한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삼국시대였고 지금의 이국시대 한반도를 지배롭게 유지하지는 의미가 그것이다. 시민들에게 통일이 좋을지를 물어보면 별무관심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2022년 우리의 GDP가 북한의 58배가 그 이유이다.

기고



최장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겸임교수 교육학박사

정치혁신 해답은 선거제도와 시민교육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총 유권자 4천400만명 중에서 당선에 기여한 표는 1천600만표로 유권자 대비 37%다. 전체 유권자 중 63%는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안 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들의 평균득표율은 총 유권자 대비 36.8%에 불과하다. 또한 위 총선에서 A정당의 정당지지율은 33.4%였지만, 의석률은 60%를 차지했다.

2022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 전국투표율은 51%, 광주시 투표율은 37.7%였다. 어떤 후보가 50% 득표로 당선됐다 해도 그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18% 득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정치가 진정한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은 ‘소수 총성 지지층에 의한, 그들을 위한, 그들의 지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좌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다. 예컨대, 독일의 총선은 600석의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로 반반씩 나누어 있지만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을 배분한다. OECD 38개국 중 25개국이 전면적 비례대표제, 8개국이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0석 중 약 18%인 47석만 비례대표제 의석이다. 이것마저도 거대정당들이 독식을 위해 머리를 짜낸 위성정당 등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전환되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1900년대에 뉴질랜드가 그랬

던 것처럼 시민에 의해 정치혁신을 이뤄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위해 참여와 실천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은 차치하고라도, 학교내 시민교육에 대한 전망은 암담하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16세 이상 정당 가입, 18세 이상 선거권·피선거권으로 현실적 정치참여가 가능한 고등학생에 대해 선거 등 참정권에 대한 교육과정이 현저히 축소되거나 누락돼 있다.

표면상으로는 진로선택으로 ‘정치’과목을 따로 배치해서 더욱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포장돼 있다. 실상은 45만여명의 대입 수험생 중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은 약 5%인 2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정치 격인 중에 ‘모든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이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향상돼야 한다. 그 발판은 공교육이고 교육과정 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와 선호가 상이할 때, 가능한 많은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 즉 상생의 정치, 통합의 정치,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 복지 선진국들처럼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필수화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이정은 교육감이 정치 참여 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하고 있을까? 정치란 이해관계의 대립·갈등을 조정·해결하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의 대립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대립·갈등이 증폭되고 있느냐에 따라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영국 킹스 칼리지 가 국제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중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나타난다. 작금의 정치상황은 국가의 안위와 민생은 뒤로하고 당파싸움에 여념없던 선조때가 연상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시민교육이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링컨이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국민은 어느 국민을 말하는가? 레이파트(Arend Lijphart)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국민의 요구와 선호가 서로 상이할 때, 과연 누가 지배하고, 누구의 이익에 부응해야 하는가.

독자투고



농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농사꾼들은 논과 밭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교통경찰은 이륜차 단속을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자주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바로 이륜차다. 가까운 논, 밭에 이동하기 편하며 작은 짐을 실기에 유용한 손과 발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편리한 이륜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할

올바른 안전모 착용은 생명보호의 시작

것이 있다. 바로 안전모 착용이다.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가벼운 사고로 보일지라도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귀찮고 거추장스러워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 시 안전모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러기에 자신의 머리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도록 하며 턱 끈을 잘 조여 사고 시 흘러내리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남경찰서는 농협 중앙회 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안전모 10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안전모를 배부받을 수 있다. 귀찮고 답답다는 이유만으로 착용을 꺼리지 말고 꼭 착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안태근·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지역대학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사활 걸었다는데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대학의 안팎, 국내의 벽을 허물고, 지역 및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쳤으며 오는 20일께 예비지정을 거쳐 9월 말 10개 내외를 최종 지정한다. 선정 대학에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 규모, 실행 계획 등을 반영해 조정 가능하다. 지역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타.

광주는 8곳, 전남에서는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성을 가능할 열쇠로 구조조정 등 통폐합과 학점 교류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와 조선간호대학은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는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대학 정보 공유,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학점 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목포대·순천대·전남도립대도 통폐합을 전제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지속적인 학생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산업의 거대한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 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그만큼 전국에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날로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역할을 하며 새 물결을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선택받고 공동체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강도높은 혁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굳이 글로벌사업이 아니라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광주·전남 대학들은 규정에 맞춰 5페이지 짜리 기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개 정도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설사 이번이 배제되더라도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개혁 요구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보다 과감하고 더욱 신속하게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대형화된 기후재난 대응 안심도시 구축 나선 광주

지구온난화에 따라 광주지역은 2018년 역대 최장 폭염(36일, 최고기온 40.1℃), 2020년 역대 최장 장마(54일, 여름철 강수량 1471.3mm), 2022년 역대 최장 가뭄(227.3일, 누적강수량 평년 대비 60%) 등 심각한 재난을 경험했다. 광주시가 ‘가뭄·홍수·폭염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뭄 대책으로는 물길 연결(워터그리드)로 ‘동북대 하나 더하기 프로젝트’가 주목된다. 올해 제한급수 위기에 따라 구축한 5만 영산강 비상급수체계를 43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10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수 감지와 예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하수 도시시설 스마트 관리체계를 준비한다. 폭염 대책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후안심마을 10곳을 조성하고, 무더위쉼터를 학교 등 시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한다.

최근 기후재난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닥치고 있다. 올해 봄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기상청의 봄(3-5월) 기후 분석 결과, 평균기온은 평년

보다 1.6도 높은 13.5도로 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최고치였다. 작년(13.2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록이 경신했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태평양 수온이 오르며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해수면이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나며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상징적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폭염이 다가오고 있다. 복잡·다양·대형화된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더 큰 고통을 받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스웨덴 싱크탱크 “北 핵탄두 30기 보유, 50-70기 조립 가능”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30기로 1년 전보다 5기 늘었으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50-70기에 이른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르면 북한은 올 1월 기준으로 핵탄두를 30기 보유해 1년 전보다 5기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미국과학자연맹(FAS)이 밝힌 추산치 ‘30기 이상’과 일치한다.

SIPRI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정보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면서도 “북한은 50-7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지만, 실제 조립한 핵탄두는 30기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핵탄두의 양은 9천576기로 86기 증가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추정치는 작년 1월 350기였는데 1년 사이 410기로 60기(17%) 늘어났다.

러시아의 경우도 4천477기에서 4천489기로 12기 증가했다. 미국은 3천708기로 1년 전과 동일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무기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의 핵탄두가 160기에서 164기로, 파키스탄은 165기에서 170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 (주)·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